

# '98 낙농육우산업



김인식  
분회 전무이사

'98년도를 마감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련의 해를 보내는 느낌이다. 우리 낙농육우농가들이 이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최악의 사태를 맞았고, 지역별 또는 소속 유업체별로 동등하지 못한 결과를 맞보아야 했다.

낙농불황이나 시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뼈저린 교훈을 느껴야 했고 낙농내부 사정이나 외부 여건에 의해서 불황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MF 경제한파로 환율이 폭등하자 연초부터 사료값 폭등은 말할 것도 없고 원료구입의 어려움에 따라 배합사료 자체의 원활한 공급마저 어려운 상태였고 우유소비부진에 따라 1만 6천톤의 분유체화현상이 생겨나는가 하면 소 값 폭락으로 젖소 송아지를 도심거리에 내

다버리는 황당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소 사육농가의 실의와 한숨은 결국 사육포기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새로운 차원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낙농육우산업의 안정 없이는 축산업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적극 대처하였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하는 듯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 하겠다.

이런 와중에서 협회의 활동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벅찼던 한해의 굵직한 주요 내용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낙농육우산업 안정의 좌표로 삼을까 한다.

## 원유가 18.4%인상 실현

원유가 인상이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 배경에 대해 아직까지도

행정부나 소비자 단체들간에도 시비가 분분하다. 낙농불황으로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마당에 원유가격을 전격 올릴 수 있는냐는 질타가 바로 그것이다.

소비부진에 따른 불황극복을 위해 전반적으로 소비재 가격이 원가 이하로 할인 판매되는 마당에 원유가격은 어떻게 해서 대폭인상할 수 있는냐는 것이 대체적인 외부 여론이고, 인상을 추진한 협회나 농림부 축산국과 물가당국이 성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인상의 배경이나 당위성은 충분하였다. 낙농가의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낙농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인상 결과일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했다. 원유가는 18.4% 인상되었지만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유질개선비 등 지원비를 모두 없애버렸으므로 인상의 혜택이 없었다는 불멘소리가 튀어나오기도 하였다.

지원비야 유업체 사정여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해 왔던 것이므로 만약 공식원유대 마저 인상되지 않았던들 종전 원유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원유가 인상은 몇가지 의미를 갖게 한다. 우선 1월 1일부터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대개 불황에서 벗어나는 국면인 3, 4월 이후에 인상되는 예를 깨고 IMF 경제 고통이 가장 심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 실무적인 검토단계를 거치기 보다는 낙농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여 동정적인 호의가 가미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향후 경제 회복이 있기까지 원유가 인상은 어렵다는 판단이고 보면 연초의 원유가 인상은 낙농가 소득 보장의 큰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협회에서는 낙농불황이 장기화되고 불가불안과 실업가중 등 경제 전체가 어렵게 되면 향후 원유가 인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밀한 작업에 들어갔고, 협회장을 중심으로 원유가인상 1월 1일자 실현 목표에 심혈을 기울였다.

낙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원유가를 통한 소득확보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동분서주한 결과였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당시 몰가당국자들도 숙연할 정도로 낙농의 어려움을 소상히

사실 협회에서는 낙농불황이 장기화되고 불가불안과 실업가중 등 경제 전체가 어렵게 되면 향후 원유가 인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밀한 작업에 들어갔고, 협회장을 중심으로 원유가 1월 1일자 실현 목표에 심혈을 기울였다.

낙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원유가를 통한 소득확보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동분서주한 결과였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당시 몰가당국자들도 숙연할 정도로 낙농의 어려움을 소상히 설명하여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 주효하였다고 본다.

설명하여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 주효하였다고 본다.

물론 원유가 인상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한 낙농가들도 있다. 업체의 사정에 따라 낙농가들에게 인상 전 유대로 계산하는 터에 남의 일이 된 곳도 없지 않다.

유업체의 경영악화로 유대를 625%, 525%씩 받지 못하는 낙농가들이 생겨났고 이런 낙농가들은 사료값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를위해 협회에서는 농림부에 건의하여 원유대 지급을 위한 자금 326억원이 유업체와 조합에 지원되도록 추진하였고, 6개월간 상환기간을 다시 연기되도록 하여 다소나마 부담을 덜도록 하는데 집중하였다.

### 1만6천톤 분유체화와 소비 홍보 활동

IMF 경제 한파가 우리 축산업에 미친 영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

로 소비감소 현상이다. 우유는 말할 것도 없고 쇠고기 등 축산물 전반의 소비를 급격히 하락시켰다.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외식 기회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의 쇠고기나 우유소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주부들이 절약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신문구독 중단과 우유배달 중단이 나올 만큼 경제 한파의 반응은 엄청났다..

이로 인해 연초부터 적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휴일과 비오는 날은 분유 쌓이는 날이 되었고, 분유 쌓이는 양만큼 업체의 적자 계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업체의 분유재고는 쌓여갔고 1만6천톤으로 늘어나 사상최대의 기록을 세우기까지 하였다. 분유체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낙농사상 유례없이 대대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협회에서는 우유소비 캠페



인 전개는 물론 차량부착 스티커 제작, 우유로 손님접대하기 등 낙농가들이 할수 있는 자구대책에 전념하였다.

낙우회별로 가두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는가 하면 지역 행정과 언론 등의 협조로 우유마시기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농림부도 우유소비감소로 인한 분유적체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여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소비확대 노력에 돌입하였다. 우선 농소상정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소비자 단체, 유통업체와 낙농가 각각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확대를 꾀하자는 결의운동에서부터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김성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우유에 밥말아 먹기를 권장하는가 하면 각 지역 행정단위별로 유업체와 연대하여 소비촉진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축협이 나서고, 직장이 나서고, 소비자단체가 낙농가를 돕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소비확대운동이

정부와 단체, 소비자간에 참으로 활발히 전개된 한해였다.

많은 국민들이 낙농가의 어려운 실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우유의 중요성과 영양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워낙 얼어붙은 경제분위기 때문인지 좀처럼 소비확대 조짐은 나타나질 않았다. 특히 시유소비확대가 보이지 않아 애를 태우게 되었다.

북한에 분유보내기운동 전개와 국산분유원료 사용이라는 구호가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 다행이었다. 환율이 워낙 높아 수입분유에 대한 차익에 재미를 볼 수 없었기에 분유수입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다.

이런 와중에서 WTO에서는 모조분유 수입쿼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정부는 거기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내리는 만큼 수입에 대한 불안감을 떠 안아야

하는 것이 우리 낙농의 현실이다.

후반기 들어 재고분유의 할인판매를 통한 소진으로 다소 숨통을 트게되었고, 우유소비도 생산과 균형을 이루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농림부와 축협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 공동으로 TV광고도 실시하는 등 종전에 구상정도로 그친 홍보활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해였고, 단합해야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교훈도 남겨주었다.

물론 일부 업체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낙농가 유대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낙농가의 원망 속에서 생업을 포기하거나 타업업으로 이탈하는 불행이 거듭된 한해였다.

## 소값 폭락과 송아지 수매 정책

지난 80년대 소값파동 이후 최악의 소값이 형성된 한해였다. 한우 500Kg 황소가 지난 8월에 150만원 이하까지 폭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우값 220만원대가 낮다며 소값 상향조정을 위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던 농가들의 목소리는 아예 낼 수 없을 정도였다.

너무 떨어져 바닥세에 맴돌자 농가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나 원망보다는 그저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비관이 일었다. 나라경제 전체가 어려워 소비를 하지 않아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 별도의 대응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 보내거나 정부가 수매 비축하면 될 것이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생각일 뿐이다. 북한에 고기를 사서 보낼 만큼 여유가 있거나 준비상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WTO 규정에 의해 수매 역시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젓소값 역시 계속 내리막 곡선을 그렸고, 송아지의 경우 3만원대까지 폭락하는가 하면 아예 거저 가져가서 키우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이에 과천청사 앞에 송아지를 내다버리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이어 축협과 여의도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 송아지를 버리는 항의 소동이 전개되었다.

국무회의에서 조차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낙농가의 어려운 당면이라며 강조하게 되는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쇠고기 소비 감소로 인해 생겨난 가격폭락 현상이기에 협회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주력하게 되었다.

우선 농가에서의 자가도축을 허용토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실현시켰고, 값싼 소를 도축 해다 이웃끼리 나눠 먹거나 양로원 등에 회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축산신문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협회장 명의의 구좌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소 사육농가 스스로의 불황극복동참 노력도 병행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에 건의하여 소값 안정을 위해서는 송아지 수매정책을 실시해야 함을 강력히 역설하여 축협을 통해 수매하게 되었다. 송아지 수매는 후에 수매한 송아지 처리문

제로 언론에 집중 성토를 당하는 등 비난을 사게되었으나 근본 취지는 송아지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매방법이나 수매송아지 처리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지역별로 조합을 통해 수매두수를 분배하였기 때문에 내다 팔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하면 수매한 송아지의 폐사 문제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송아지 두수를 줄여 가격폭락을 막고 최소한 수매가 10만원 이상을 보장토록 하기 위한 이 정책은 송아지 가격 조기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조합과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농림부 관계자들의 애로와 고충을 이해하면서, 송아지 수매는 총17,695두를 실시하였고, 송아지 중탕을 해다 먹는 새로운 가공방법까지 개발되게 되었다. 많은 노력과 여러 정책의 효과로 송아지값은 다시 회복세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입쇠고기 쿼터 18만7천톤의 수입을 유보하다가 연말에 집중 수입하는 터에 다시금 한우가격 폭락의 조짐이 있어 우려되고 있다. 수매우 재고와 수입육 재고, 거기다가 유보된 수입쿼터가 다 들어 올 경우 소값은 언제든지 곤두박질 할 수 있다.

수매 재고 한우고기를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직거래를 통해 시중 소비자 가격인하 유도에 적극 나서는 등 소값 안정을 위한 노력이 분주하였다.

## 낙농자조금 조성

연초부터 소비감소로 분유재고가 급증하고 여기저기서 위험경고 신호가 나오면서 연일 대책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협회는 협회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우유수급안정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된 것이다.

농림부는 농소상정회의와 낙농업계 관계자를 불러 돌파구 마련에 열중하였으나 나온 답은 거의 비슷했다. 원유생산을 억제하여 소비에 근접하도록 맞추어야 한다는 것과 우유가격을 낮추어 소비자들이 많이 사먹게 해서 소비를 늘리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농림부는 젓소 노폐우 도태와 함께 원유가격인하를 통한 우유제품가격 인하방침을 굳히게 되었다.

젓소 도태는 원유생산량을 기준하여 저능력우를 대상으로 하되 착유우 30여만두 중 약 10%인 3만두를 목표로 추진하는 방침이었다. 도태우 두당 2~3십만원에 거래되는 당시 소값에 비춰볼때 낙농가들에게 도태를 강요하는 것이 무리이긴 하였지만 생산 감축 없이는 난국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적극 지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도태지원비를 3십만원 정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우유 남는 정도가 너무 심각해지자 낙농가도 정부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협회에서 강력히 건의하여 5월25일부터 8월말까지 도태한 젓소에 대해 두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조치하

였다.

젓소도태는 총21,571두가 실현되어 당초 목표에는 미흡했으나 우유수급안정과 젓소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향후 원유부족 사태를 예견하면서 젓소도태와 송아지 수매, 그리고 부루세라가 그 원인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선택으로 추진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원유가격 인하방침은 앞서 언급한대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농림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원유가인하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정부방침을 철회하게 된다. 낙농가의 원유가는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오르지 못한다는 판단이고 보면 원유가는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낙농가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농림부와 협회가 서로 강하게 맞서게 되었고, 5월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관용 축산국장은 원유가인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통보하는 자리였고, 협회 임원들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대신 젓소도태와 자조금조성을 제시하였다.

도태를 통한 생산감축과 자조금조성으로 낙농가 스스로가 소비홍보에 나서서 수급안정을 실현시켰다는 결의를 표시한 것이다. 낙농가들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게 되었고 결국 원유가인하는 유보되었다.

그 대신 우유소비자가격인하와 함께 7월 1일부터 체세포수 3등급



에 대한 30원 감액을 60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체세포수 페널티 강화는 이후 두고두고 낙농가의 불만 요인이 되고있다.

그러나 충남집유조합장 등 낙농가 대표들이 농림부 등에 건의하여 페널티를 100원 이상으로까지 건의했던 사례가 있고 보면 우리 낙농가들의 단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조금은 우리 스스로의 과제로 제시된 만큼 낙농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6월30일 낙농자조금추진위원회대회를 축산회관에서 개최하여 역사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되었다. 원유대 Kg당 5원씩 3개월간 유대에서 공제하는 자조금은 지역에 따라 그 반응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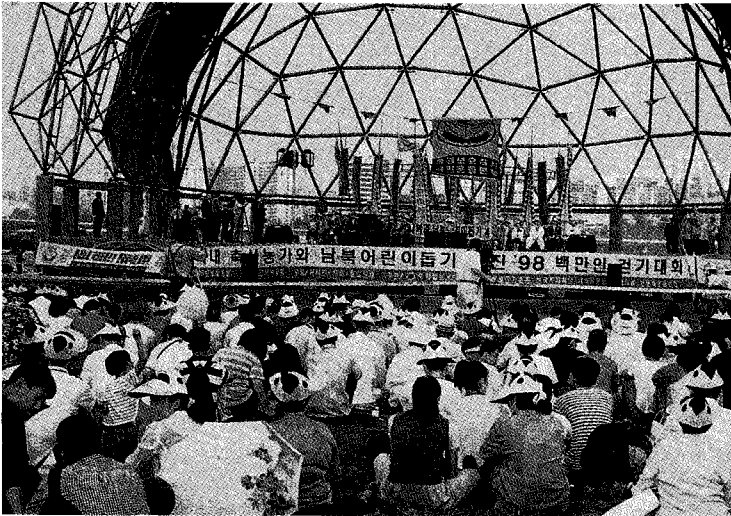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단결된 지역은 참여가 쉽게 결정되고 이미 유대공제를 완료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하지 못한 곳은 아직도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아예 참여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도자 혹은 낙농가들도 있다.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단합에 예외가 되고있다. 돈 부담을 즐겨할 리는 없다.

그러나 낙농의 위기를 실감하면서 우리 스스로 소비홍보에 나서 수급을 안정시키고 정부의 원유가격 인하조치를 철회시킬 대책에 외면하는 낙농가들이 있는한 한국낙농의 장래는 불투명하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싶다.

자조금으로 얻는 이익은 차지하고 싶어하면서 비용부담에는 무임승차하고자 한다면 낙농업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정책에서도 그러하고 소비자의 동정심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7월27일자로 「농업을 걱정하는 농림공무원들의 모임」명으로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광고가 게재된 적이 있다. 어려운 소사육 농가들을 위해 쇠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자는 호소 있는 광고에 낙농육우 농가치고 가슴 뭉클하지 않은 이가 없



었을 것이다.

농림부 장관에서부터 말단 여직원에게 이르기까지 돈을 내어 모금을 해서 모든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물론 개별 이름은 거론 없이 상상 유례없는 농림공무원들의 동참이자 솔선 수범한 홍보활동이었다. 낙농육우농가들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만해서 광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를 내다버리고 원유값마저 제때에 못 받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기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광고까지 하도록 유도된 것이리라.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무려 37일간 전국 4천리 국토도보행진을 하였다. 10대에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들이 연인원 3만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는 고등학생과 지체부자유인까지 섞여있었고 발바닥이 부르트고 발가락이 잘리는 고통의 사천리 행군이었다.

그런 고통의 대가로 모금하여 우리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유를 사다 북한에 보내겠다는 그야말로 순수한 애국시민의 거룩한 운동이었다. 도보행진의 마지막날인 37일째 해산행사는 이희호 여사와 고건 서울시장, 김성훈 농림부장관, 그리고 3만여 시민이 동참하여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고통의 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발표하는 행진대표자들의 체험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막연히 낙농가가 어렵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4천리 도보행진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려는 모습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이 있다면 우리 낙농가들의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의 돈으로 우유소비가 되고, 그래서 돈 안내고 혜택 보려는 낙농가들이 있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낙농자조금은 우리 농업 자조금 실시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정착이 되면 낙농업은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낙농가 주도의 정책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 낙농진흥법 후속조치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낙농진흥법개정 이후 우리 낙농업계의 관심은 온통 진흥회 구성 이후의 낙농판도변화에 집중되었다.

'99년1월 1일부터 과연 진흥회 출범이 될 것이냐 하는 의문에서부터 진흥회가입이 과연 이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낙농제도개선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낙농진흥법 개정애 앞장서 활동한 낙농가들이 더욱 큰 관심거리였고 협회에 문의가 쇄도하였다. 진흥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원유검사의 공영화와 집유체도의 개선, 원유수급의 안정 그리고 낙농진흥시책의 법제화에 있다면 그 기초과제인 집유선의 변화는 낙농가도 유업체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농림부에서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협회장이 참여하여 낙농가 입장을 대변하였다. 7인으로 구성된 설립위에서는 진흥회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제를 논의해왔다.

또한 진흥회 사무국에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주요과제를 논의해왔는데 협회에서는 지난번 임기 중에 선임 요청을 받았기에 전임부회장

중에서 2명이 선임되었고, 조흥원, 정세훈 당시 부회장과 집행부를 대표해 전무가 참여하게 되었다.

진흥회 구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은 물론 진흥회발족 이후 처리될 주요안건에 대해 낙농가를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진흥회 출범과 관련해 그 동안 몇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검사공영화방안, 집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었다.

현재 집유조합 선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농림부의 기본원칙은 1개도 1집유조합이 방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집유조합선정과 관련해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낙농가를 위하고 우리나라 낙농안정을 위해 과연 이대료가 좋은가 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법 개정 이후 지루한 논쟁만 계속된 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공포가 늦어지고 정관 역시 설립시점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낙농가나 유업체 설득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대개 낙농가들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분위기에 편성해 유업체 역시 진흥회를 통한 원유 구입방안과 자체 집유를 저울질하면서 유리한 방법을 택하려는 입장이다.

진흥회 구성의 세축이라 할 수 있는 우리협회와 유가공협회, 축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축협중앙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집유조합 선정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자조금으로 얻는 이익은 차지하고 싶어하면서 비용부담에는 무임승차하고자 한다면 낙농업은 외면당할 수 있다. 정부정책에서도 그러하고 소비자의 동정심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낙농자조금은 우리 농업 자조금 실시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정착이 되면 낙농업은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낙농가 주도의 정책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지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 부루세라 발언과 대책활동

낙농육우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부루세라까지 겹쳐 옆친데 덩친격이 되어 버렸다.

법정전염병인 부루세라를 퇴치하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나름대로 고심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예방근절 대책이 오히려 부루세라를 불러들인 꼴이 되고 말았다.

혹자는 한국 수의학 사상 치욕의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하여 돌팔매를 던지기도 한다. 결과를 두고 시비할 의도는 없다. 다만 두번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과제에 삼아야 할 것이다.

부루세라를 근절시킨다는 목적 아래 예방백신 RB51을 미국의 예로 삼아 접종하였는데 백신제조과정에서의 의문과 접종대상에서의 문제, 그리고 감염우의 전염여부 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조과정에서의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강한 질타와 함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지

리라 본다. 접종대상우의 경우 4~10개월의 송아지 대상으로 미국에서도 접종된데 비해 우리는 임신우까지 포함시킨 것이 큰 화근이었다고 보여진다.

RB51을 접종한 소의 일부가 유사산 되었는데 1회에만 생겨나는지 아니면 이후 반복될지 여부가 농가들의 걱정거리이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 여부에 대해서도 명쾌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유사산 피해는 엄청났고, 초기에는 부루세라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혹만 부풀리게 되었다.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 신뢰조차 하지 않으려는 격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농림부 파악에 따르면 RB51 접종후 제주도 한우 등에서 500두가, 경기 충남등 젖소에서 1,186두의 유산사태가 9월이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방접종을 유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월중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피해 농가도 참여하여 분석 원인 규명에 착수하게 되었고, 피해보상대책위도 구성되어 구체적인 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추진중이다. 물론 이 과정이 협회에서 합당한 보상대책방안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이미 장차관을 수차에 걸쳐 면담하여 의중을 제안하였고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11월까지 신고 접수된 6천5백여두의 젖소에 대한 확인과 보상은 물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됨을 역설하고 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이 2차 감염여부이고, 소비자들의 우유와 쇠고기 에대한 거부 반응이였었다. 다행히 소비자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로 큰 무리가 현재까지는 없어보인다.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관련 예산이 마련 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정치권에도 요청활동을 협회에서 추진하였다.

협회의 활동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않아 간혹 피해농가들로 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협회가 회원농가 대변단체라는 본분을 이해한다면 조만간 보상 대책이 제시될 것이다.

## 농가 및 농업 공동과제에 매진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거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농가 부채 문제이다.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원금상환과 이자 부담은 물론 농·축협으로부터의 상호 신용자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이다.

특히 축산자금중에서 소에 관한 한 부채가 큰 규모이고, 낙농육우 산업이 어려운 터이므로 유달리 우리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우 농가들의 경우 소값 폭락까지 겹쳐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마저 갚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낙농가 역시 소값 폭락과 우유 수급마저 불안정해져 원유대 이외의 유질개선비 등 지원이 중단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부채 대책위원회를 농민단체와 학계, 농림부가 함께 구성되었고 농가대표로 김남용회장이 참석하여 활동하였다.

물론 농단협 강춘성회장(현재 낙농업 경영중)도 함께 참여하였고, 낙농업을 경영중이다. 미흡하긴해도 원금 2년 상환유예, 이자 5%로 인하하여 정책자금에 대응하였고 상호금융 역시 정책자금 수준으로 조치토록 하였다.

농가부채 해결방안과 관련 9월 15일 보라매공원 집회 개최를 두고 뒷말이 있었다. 일단 이사회에서는 협회 요구안이없을 뿐더러 당시 농민단체 요구안이 논의중에 있었고, 당초 대회 집행부가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점을 들어 추후로 유보 시키게 되었다. 잘해보자는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협회가 대회에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름을 이 기회에 밝혀둔다

올 정기국회에서 농업의 최대의 관심사인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작업에 협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65개 농업관련 단체로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마추위)」를 결성하여 우리협회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마사회 환원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138명의 서약서(동의서)를 받아 110만명의 서명과 함께 김남용회장을 대표로한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시키기도 하였다. 110만 서명부가 무려 315권이아 되어 국회청원의 진기록을 남길만큼 협회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중이다.

성명 및 입장발표, 3당 총재면담 및 건의활동,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비록 협회나 낙농육우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지는 몰라도 우리 축산업 나아가 농업안정을 위한 활동이기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협회사무실에 두고 농민의 권익보호와 대변 활동에 함께 전념하고 있다. 42조 구조개선 후속 투자문제, 농특세 조치문제, 마사회 농림부환원과제, 인천 동야 매립농지 전용문제, 농조통합문제, 의보통합과제, 소값문제, 수해피해, 농업재해 대책문제 등 농업현안의 굵직한 과제 해결에 협회가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낙농육우농가의 권익 대변활동을 위해 98년 한 해동안 나름대로 협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